'경제 위기라면서'… 재계 총수 또 줄줄이 국감 소환

이재용·정의선 등 재계 CEO
위기 돌파위해 현장 동분서주

올 증인·참고인 기업인 100명
국회, 부문별 증인 채택에 눈살
호통·망신주기 국감 우려 지적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이 갈수록 커지는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경영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곧 예정된 국정감사가 이들의 발목을 잡지 않을지 재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국내 주요 대기업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장기화, 일본 수출규제, 환율·유가 불안 등 대외 악재 등으로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 위기가 단기 악재에 그칠 것으로 보이지 않은 만큼 주요 그룹 총수들은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미래전략을 세우고 현장 점검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와 국정감사가 다가오면서 올해도 어김없이 기업인을 줄소환하며 호통국감·망신주기 국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30일 재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내 주요그룹 총수 중 신동빈 회장이 유일하게 국감 증인으로 호출된 상태다. 롯데그룹 계열사 롯데푸드가 협력업체인 후로즌델리에 거래상 지위남용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보건복지위원회가 신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기 때문이다.

국회는 신 회장을 불러 롯데그룹 계열사 롯데푸드가 협력업체인 후로즌델리에 거래상 지위남용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추궁할 예정이다. 갑질 피해를 주장한 후로즌델리는 2013년 파산했으며, 이듬해 롯데푸드는 7억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했다.

그렇다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도 안심하긴 이르다. 정무위에서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분식회계·편법승계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이 부사장과 김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이며 아직 증인 채택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

여기에 자동차 부품업체에 대한 현대자동차·현대모비스의 갑질 의혹 관련 문제도 국감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이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여기에, 총수는 아니더라도 국감에 불려가는 기업인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17대 국회에서는 국감 출석 요구를 받은 기업인이 연평균 52명에 그쳤지만 20대 국회 들어서는 지난해까지 연평균 159명이 출석 요구를 받았다.

올해도 현재까지 각 상임위원회는 100여명이 넘는 기업인들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올해 논란이 됐던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정치 조작 사건과 관련해 신학철 LG화학 부회장, 허세홍 GS칼텍스 대표, 문동준 금호석유화학 사장, 임병연 롯데케미칼 부사장, 김창범 한화케미칼 대표 등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산자위는 에너지저장시스템(ESS) 화재의 원인과 책임을 가리기 위해 신학철 부회장과 임영호 삼성SDI 부사장에 질의할 방침이다. 대형 마트와 복합몰의 지역상권 침해 여부와 관련해선 이갑수 이마트 사장과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부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환경노동위원회도 오승민 LG화학 여수공장장, 박현철 롯데케미칼 여수공장장, 장갑종 금호석유화학 여수공장장, 김형준 한화케미칼 여수공장장, 고승권 GS칼텍스 전무 등을 증인으로 부른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장인화 포스코 사장, 최선목 한화 사장, 홍순기 GS 사장, 이갑수 이마트 대표 등을 불러 대기업의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모금이 부진한 점을 질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박정호 SK텔레콤 대표, 황창규 KT 회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등 통신 3사 대표와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한성숙 네이버 대표,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처럼 국감에 그룹 총수를 증인으로 세우는 것에 대해 재계는 불편한 입장이다.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 수출 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룹 총수들이 잇따라 해외 출장길에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국감에 발목잡힐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이 건설 중인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도심 지하철 공사현장에 이어 일본을 방문하는 등 현장 경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이 부회장은 일본에 체류하면서 재계와 금융권 관계자는 물론, 일본 통신·가전업계 경영진과 폭넓게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도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근 미국을 방문해 자율주행 합작사를 설립키로 했다. 이 외에도 정 수석부회장은 미국 시장 상황을 직접 살펴보고 신규 투자 문제 등을 챙기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국회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총수 등 관심도가 높은 인사를 국감에 불러 본인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경우도 많다"며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이 경제 불확실성이 확산됨에 따라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와 생존전략 모색에 고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기업인들을 무분별하게 소환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2019년 국정감사 주요 증인

보건복지위원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채택), 10월 7일 출석 예정
정무위원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증인신청, 채택은 미정)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학철** LG화학 부회장, **문동준** 금호석유화학 사장, **허세홍** GS칼텍스 사장, **임병연** 롯데케미칼 부사장, **임영호** 삼성SDI 부사장(채택), 10월 2일 출석 예정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장인화** 포스코 사장, **최선목** 한화 사장, **홍순기** GS 사장 등(채택), 10월 18일 출석 예정

자료/ 국회 각 상임위

우리·KEB하나銀 은행장 증인 출석 하나

금감원 DLF 중간검사 발표

증인 채택에 분수령 될 듯
DLF판매 수입 397억 달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10월1일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을 판매한 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한 현장검사 중간결과를 내놓는다. 검사결과에 따라 10월 4일과 8일 예정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금감원 국정감사에 우리·KEB하나은행장의 증인 출석 여부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10월1일 DLF, DLS에 대한 현장검사 중간결과를 발표한다. 검사는 금감원 일반은행검사국, 특수은행검사국, 금융투자검사국, 자산운용검사국 등이 함께 진행했다.

현재 여야가 DLF 사태에 책임이 있는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의 은행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국감 증인 출석 여부를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어 이번 중간결과는 증인 채택에도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상품이 주로 판매됐던 2017~2018년 KEB하나은행에서 개인영업그룹 부행장으로 재직했던 장경훈 하나카드 대표이사 등 당시 실무진이 증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편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의 DLF 상품은 다음달 2일 또 만기가 돌아온다. 4차 만기를 앞둔 우리은행 DLF의 기초자산인 독일 10년물 국채금리는 지난 27일을 기준으로 -0.573%를 기록했다. 올해 안에 10여차례 만기가 더 남은 이 상품은 손실 규모가 커지며 최근 나흘간 중도환매 규모가 100억원에 육박했다. KEB하나은행 DLF의 손실률 또한 기초 자산인 미국 5년물 이자율스와프(CMS) 금리와 영국 7년물 CMS 금리가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갈수록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DLF 판매로 벌어들인 수수료 수입은 총 39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KEB하나은행은 작년부터 올 7월말까지 2조 4457억원의 DLF를 팔아 227억원의 수수료 수입을 올렸다. 우리은행도 1조 6110억원 어치를 팔아 170억원의 수입을 거뒀다.

DLF 사태로 인한 피해가 날로 커지면서 관련 제도 개선방안도 주목받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30일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금감원의 중간조사 결과를 보고 10월 말쯤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선방안으로는 고위험 상품에 대해 일정 부분 판매를 제한하거나, 판매과정에서 추가 보호장치를 두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민영 기자 hong93@

일문일답하는 홍남기와 이혜훈

질문 일문일답을 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3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과 경제분야 대정부 /연합뉴스

3.5배 넘게 몰려… '보금자리론' 고려할 만

›› 1면 '74조 몰린 서민형'서 계속

대환은 오는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먼저 대상선정 기준인 2억1000만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신청자에게는 이번주 중으로 심사대상자임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최초 심사대상자 중에서 요건미비·대환포기가 발생하면 차상위 집값 신청자에게 순차적으로 기회를 부여한다.

안심대출 공급규모는 20조원으로 유지되며, 추가 공급 계획은 없다는 점은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손 부위원장은 "이번 출시를 준비하면서 신중하고 합리적인 수요예측 과정을 거쳤지만 결과적으로 수요에 비해 신청이 3.5배 수준으로 많았다"며 "탈락자의 상당수는 안심전환대출과 유사한 2% 초반대 금리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해 갈아타기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손 부위원장은 또 "이와 별도로 무주택자를 위해서는 청년이나 신혼부부, 다자녀 등 서민 실수요자 입장에서 보다 더 적합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나 상품개발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상미 기자

정부 '청탁금지법' 개정 추진

›› 1면 '서울교통公'서 계속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14년 이후 채용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원의 친인척 등 124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했으며 이 중 일부가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감사원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청탁금지법 개정과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감사원 지적사항과 유사한 불공정 채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공기관 채용이 공정하고 능력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블라인드 채용을 안착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월 20일 발표한 채용비리 근절대책 중 추진 중인 청탁금지법 개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개정안은 공직자의 민간 분야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손현경 기자 son89@